"광주 유행 코로나는 전파력 6배 높은 변종 바이러스"

중앙방역본부 526건 유전자 분석 "광륵사 관련 사례 GH 바이러스 미·유럽 입국 확진자서 나타나"

광주에서 유행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이 '전파력이 6배 높다'는 GH 그룹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연구진은 변종인 GH 그룹 바이러스의 전파속도가 최고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상태로, 정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63.3%인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V 그룹 바이러스 127건, S 그룹 바이러스 33건, GR 그룹 바이러스 19건, G 그룹 10건, 기타 그룹 4건 등의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 스를 S, V, L, G, GH, GR, 기타 등 총 7개 유형으 로 분류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 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초 이전 에는 주로 S와 V그룹이 확인됐다"며 "4월 초 경북 예천 집단발병과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 발생 사 례 이후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소와 광주 광륵사 관 련(금양오피스텔) 사례를 포함해 최근 발생 사례 는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GH 그룹 바이러스는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는데 이태원 클럽과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삼성서울병원, 양천구 탁구장,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서울시청역 안전요원 등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



단감염 사례에서 주로 검출됐다.

또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광주 금양오피스텔 방문판매업체 관련자인 광주 45번(제주도 여행)과 대전 방문판매업체 및 꿈꾸는교회 관련 집단 감염의 바이러스 유형도 GH 그룹에 속한다. 경북 예천과 대구 달서구 일가족,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입국한 확진자들에게서도 GH 그룹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른 바이러스 그룹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 우한교민 등 해외입국자의 경우 S 그룹 바이러스 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 회 확진자들한테서는 V 그룹 바이러스가 각각 검 출됐다

바이러스 그룹별 검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S 그룹은 유행 초기의 해외유입 사례와 우한 교민, 구 로콜센터, 해외입국자 등이며, V그룹은 신천지 대 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성남 은혜의강 교회, 정부 세종청사(해양수산부) 등이다. G 그룹 바이러스는 모두 해외입국자 사례였다.

GR 그룹 바이러스는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과 해외입국자 등에서 발견됐다.

정 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6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용봉동 일대를 긴급 방역하고 있다.

회형배 기자choi@

"GH그룹 바이러스는 S(그룹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되고, 인체세포 감 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확산세 지속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언제?

市 '연속 3일 두자릿수 확진자' 규정 이시장 "컨트롤 안되면 격상 불가피" 시민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달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 조치가 내려질 지 관심 이 쏠리고 있다. 3단계는 사실상 모든 일상을 중단 하는 조치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타 격이 불가피하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2차 유행이 시작한 지난달 27일 이후 이날 오후 5시 현재 총 83명의확진자가 발생했다. 자가격리자가 1000명이 넘고,추가 검사도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은이어질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일단 지난 1일 정부의 1단계(생활 속 거

리 두기) 조치를 2단계로 높였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집회는 금지됐고 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과 이용 자제령이 내려졌다. 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학원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없게 됐다. 광주를 연고지로 한 프로 스포츠단 KIA타이거즈와 광주FC도 한동안 무관중 경기만 치르게 됐다.

시는 이 같은 고강도 조치에도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일 민관 대책위원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단계 격상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격상 기준을 '연속 3일 이상 두 자릿수 지역감염이 발생할 때'로 규정했다. 현재로선 매일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3단계로 격상하면 대구와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유행한 3~4월의 상황으로돌아간다.

3단계때엔 10인 이상 모든 모임·집회가 금지되며, 고위험 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고 기업은 재택근무가원칙이다.

다만 시민들이 방역수칙만 잘 지켜준다면 3단계 조치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방역 관계자들 의 설명이다. 이미 확진자의 접촉·감염 루트를 모두 파악하는 등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관리 범위내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수칙 이행과 자발적인 시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가장 고강도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삶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불편을 감내해 주시길 바란다"고호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사회복지시설·병원 전수 검사

252개소, 2만8220명 대상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전 차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도

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추가 발생을 차단 하기 위해 고위험 사회복지시설, 의료 기관 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 대상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 시설, 정신보건 시설, 정신병원 폐쇄 병동등 252곳으로, 종사자 1만700여명, 입소자 1만7500여명 등 2만8200여명이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시설군인 요 양원의 입소·종사자에 대해서는 7일부터 우선 검 사하고, 그 외 사회복지 시설과 병원에서는 9일부 터 추진한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취합 검사 기법인 풀링 (Pooling) 검사를 한다. 취합 검사는 5~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전원 개별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생할 경우 확진자 발생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해당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수조사실시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수 검사를 통해 무증상, 경증 환자 등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를 선 제적으로 찾아내겠다"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 고, 지역 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시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6일고시했다.

기간은 15일까지로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해 확 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운송 사업자, 운수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승차부 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미착용자가 안전운행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十五 编章 水平는 자체병건

확실한 변화대한민국 2020



자치분권 실현!

주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2020, 1)하였고,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